

Issue & Focus

Hansun Foundation

양극화와 저성장, 나눔테크놀로지 개발로 극복해야

김원식 (한선정책연구원 조화사회연구소장,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양극화와 저성장, 나눔테크놀로지 개발로 극복해야



김원식 (한선정책연구원 조화사회연구소장,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¹⁾

우리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와 저성장이다. 이는 선진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들이 당명한 문제로 각국에서도 대안 없는 당연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소위 ‘신질서(New Normal)’이라는 용어로 포장되고 있다. 즉, 우리나라도 지금까지의 고도성장 프레임에서 떨어져 나와 세계경제 흐름에 이미 편입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양극화와 저성장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두 요소가 단순히 당면한 경제적 현상의 하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점이다. 그대로 방치할 경우 심각한 사회적 갈등에 이어 자본주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이제는 자본주의의 부산물로 발생한 사회적 갈등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해서 경제성장을 지속시켜야 한다.

칼렛츠키 (A. Kaletsky)는 『자본주의 4.0』(2009)에서 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 경제가 낳은 현재의 상황을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통하여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와 민간의 협력은 이미 1970년대에 시작되어 오늘에 이른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극화와 저성장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새로운 자본주의의 진화를 다시 준비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동안 정부 역할에 대하여 민간부문의 참여를 허용해 왔으나 오히려 이들은 정부를 대신하여 역할과 자원을 독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 민영화 부분에서의 생산 독점, 그리고 고용 및 고임금 보장 등에 따른 노동시장 양극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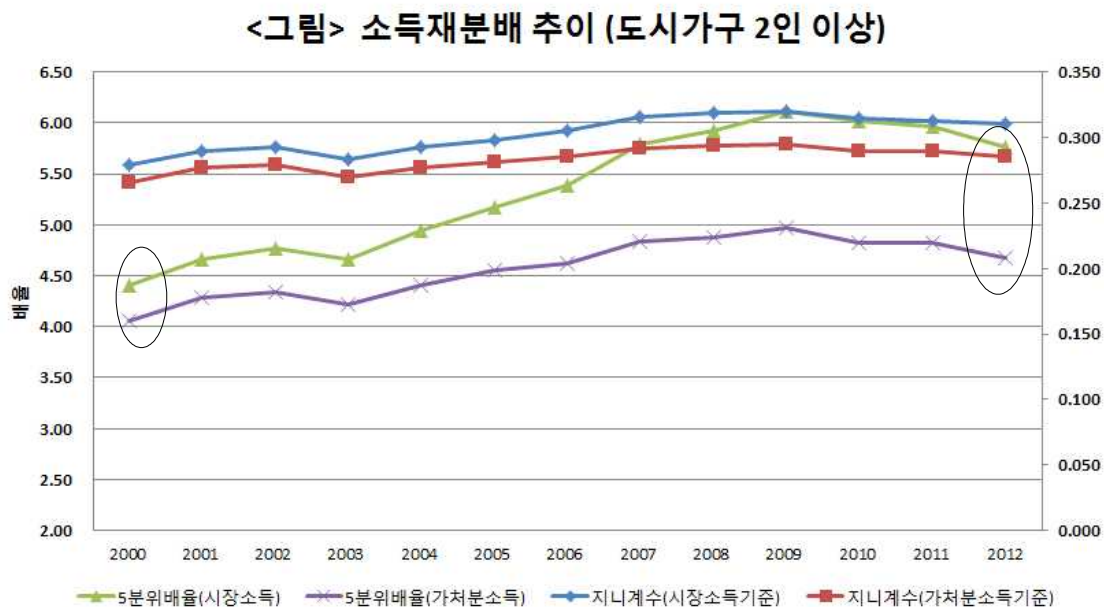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총생산 대비 사회보장비 지출을 1995년 3%대에서 7%대로 증가시켜 왔다. 하지만 양극화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사회적 갈등은 더 커지고 있다. 복지제도의 부실관리에 의한 예산

1) 한선 이슈&포커스 (2013.10) 원고임.

누수, 복지수혜 대상자들의 도덕적 해이, 사회 각 계층의 이기주의 등은 더 은밀해지고 지능화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양극화는 복지지출의 확대나 관련 공무원의 정원을 늘리는 수준의 관리감독 강화로 결코 해결될 수 없다.

그렇다고 우리사회의 사회보장제도들이 시장주의 체제에서 나타난 양극화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장경제에서 발생한 양극화 문제는 매우 효과적으로 보정돼 왔다. 2000년도에 시장소득에 의한 5분위배율²⁾은 4.40배였으나 가처분소득에 의한 배율은 4.05배로 격차를 0.35배 줄였다. 이후 지속적으로 사회보장지출이 늘면서 2012년도에는 5.76배에서 4.67배로 1.09배 줄었다. 그림에도 5분위비율은 아직 2005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경기가 다소 회복되고는 있으나 천조원대의 가계부채, 7%대의 청년실업률, 전세난, 3%대의 낮은 저축률을 고려할 때 양극화나 저성장 문제는 크게 개선되기 힘들다.

이는 더 이상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자본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이제는 지속적인 성장을 전제로 하여 시장소득의 양극화 문제부터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시장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생산물시장 및 고용시장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격차 확대, 산업 간 부

2) 도시근로자가구를 소득별로 20%씩 5개 분위로 나눴을 때 가장 높은 5분위 소득을 가장 낮은 1분위로 나눈 배율

가가치 격차 확대, 노동분배율 하락, 노동시장에서의 비정규직 증가 등에 기인한다. 또한 개인 간 격차에도 기인한다. 건강상태격차, 교육격차, 기회격차 등이다. 이러한 격차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나눔테크놀로지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의 복지정책은 정치적 불완전성으로 격차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포퓰리즘이다. 최근 사회적 갈등을 낳고 있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기초한 기초연금안은 고소득 노인의 저항이 없는데도 정치권에서 먼저 전체 노인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하고, 젊은이들이나 노동조합이 이를 더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부자노인들이 20만원에 불과한 기초연금을 알뜰살뜰 생활비에 보탬이 없다. 이는 심각한 정부예산낭비를 의미한다.

사회적으로 양극화문제를 해결하는 다른 축은 자발적 기부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부가 감동을 주거나 사회적 갈등 해소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부자들의 기부행위에 대해 기부 받는 측은 고마워하지 않는다. 이는 결과적으로 형식적 기부를 낳는다. 진심으로 이루어지는 기부는 기부를 주는 자나 받는 자다 모두 즐거워야 하고 고마워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보편적 복지, 부자증세, 동반성장위원회, 의료보장, 최저임금, 경제민주화 등으로 양극화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들은 서로 개념은 같이 하면서도 각기 다른 기준과 전략으로 접근되고 있다. 정부의 노력과는 반대로 오히려 더 많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성장률을 저하시켜서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국력과 인적자본은 서서히 고갈되어 갈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차적 소득분배가 결정되는 시장의 배분에서 양극화가 개선되고, 동시에 조세와 복지지출로 이뤄지는 정부의 소득재분배가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소득분배로 고용주와 근로자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기업복지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2차적 정부의 소득재분배를 위해서는 복지제도가 노동집약적인 비생산분야라는 인식을 버리고 정보 통신과 전자 등의 신기술을 접목시키고 비용을 절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즉, 생산적 시장소득 배분시스템과 효율적 소득재분배 시스템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앞으로 다가 올 글로벌 환경에서 자본주의 5.0의 핵심이 될 것이다.